

사회학적 시각을 통한 기업사 연구의 재정향: ‘기업집단’ 프레임과 ‘국책회사’ 분석*

조정우**

| 목 차 |

I. 머리말: 제도적 동형성과 식민지 경제체제	프레임
II. 기업사와 사회학 연구의 접점: 국가-기업 관계의 비교역사분석	IV. 분석 대상과 쟁점의 확장: 회사 법제·홀딩컴퍼니·국책회사
III. 분석 단위의 재구성: ‘기업집단’	V. 맺음말: 기업사 연구의 재정향

| 논문요약 |

이 글은 해방 이전 식민지 조선에서 설립·운영된 기업들에 대한 주요 연구 쟁점을 검토하면서 연구사의 공백지점을 지적하고, 이 공백을 메울 연구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분석 단위로서 ‘기업집단’ 프레임의 설명 적합성을 주장하고 ‘국책회사’의 역사적 역할을 복권하는데 있다.

기업집단 프레임으로 그간 식민지 기업 연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회사법제의 문제, 지주회사를 중핵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또 이 지주회사에 자본을 공급하는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 등의 연구문제들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문제들을 기업사 연구의 쟁점과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접근전략이다. 여기서 중심축을 이루는 논제는 바로 ‘국가와 기업의 관계’이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4S1A5B8066696).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이러한 접근을 통해 식민지 경제체제에 있어 ‘식민국가’의 영향을 일방향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반대로 기업 활동에 있어 사회적·정치적 제약을 외생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두 상반된 접근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 보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즉 국가-기업 간 ‘관계’의 중층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사 연구의 접근방법을 재정향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논점이다.

▪ 주제어: 기업집단, 민족기업, 국책회사, 지주회사, 국가-기업 관계

I. 머리말: 제도적 동형성과 식민지 경제체제

현대 기업사·경영사를 확립한 알프레드 챠들러(Alfred Chandler)는 기업사 연구 연작에서 미국의 ‘법인기업’을 자본주의 경제조직이 지향해야 할 모델로 제시하였다. 주저인 『구조와 전략』(1962)에서 그는 미국 법인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듀폰, 제너럴 모터스, 스탠다드 오일, 시어즈앤로백을 들고, 이 4개 기업이 1920-30년대에 다각화와 사업부제라는 조직혁신을 통해 기업의 거래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최고도의 효율에 도달하였고, 이를 통해 ‘대공황’을 이겨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기업 조직화의 모범적 모델로서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당대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이 기업조직의 이념형(ideal-type)과는 분명히 다른 여러 형태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기업의 역사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 성과들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속에서 이윤의 최고도화를 지상과제로 매진하는 기업의 상(像)과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 기업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은 다양하게 형성된 경제체제 속에서, 또 국가 및 사회와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계를 맺으며 존재해 왔기 때문에 챠들러식의 ‘효율성론(efficiency theory)’만으로는 그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펼쳐진 기업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의 존재와 그 역할을 무시하고서는 독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메이지기 일본의 관업기업(官業企業) 불하가 일본 자이바츠(財閥) 형성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 또 진후(戰後) 대만의 국민당 당영기업(黨營企業)과 중국의 국영·국유기업들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생각하면, 적어도 동아시아 기업사 연구의 핵심 주제는 조직구조의 ‘효율성론’이 아니라 국가-기업의 ‘관계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이다. 한국 역시 그러한데, 한국 정부와 재벌 간의 심도 깊고 내밀한 관계는 상식적인 얘기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창출한 한국의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는 생각보다 그 역사적 연원이 오래된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 기업체제의 형성사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구조와 이를 규정한 일본제국주의의 성격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의 경제정책과 그 유산, 또 일본 제국경제의 분업구조 속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치와 성격, 그리고 더 나아가 조선-만주관계, 특히 한국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의 모델로서의 만주국이 준 영향 등은 한국 기업사를 설명하고자 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 조건이라 하겠다(Cummings 1984; 한석정 2016). 게다가 한국이 1965년 한일 협정을 기점으로 다시 일본경제의 자장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 속에서 일본의 경제제도와 기업조직을 ‘모방’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현대 한국기업사 연구를 1945년 8월 15일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디마지오와 파워(DiMaggio & Powell 1983)이 논의한 ‘제도적 동형성’은 이 국가-기업 관계의 역사적 형성과 지속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설명 틀이다.¹⁾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 속에 있었지만, 미국적 경제시스템으로 ‘수렴’된 것이 아니라 식민모국이었던 일본의 경제체제와 강한 동형성을 띠게 되었다는 사실은, 제도의 구축과 확립에 있어 역사적 경험과 궤적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기업집단(business group)’의 역사적 계보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이는 기업집단으로서의 한국 재벌은 바로 전전(戰前) 일본 자이바츠(財閥)의 기업지배구조를 이어받으

1) 장덕진과 배영(1999)은 한국의 국가-기업 관계를 논의하면서, 기업구조의 동형성을 ‘발전경로’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를 통해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면서 ‘한국적으로’ 변용한 형태라는 데에서 착안한 것이다. 물론 한국의 주요 재벌들이 직접적으로 식민지 경제에서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와의 밀착된 관계 및 가족 중심의 배타적 기업지배구조, 비연관 산업의 ‘문어발식’ 다각 경영, 국책 금융기관의 특혜적 자금 지원 등 재벌 경영의 핵심적인 특징을 제국일본의 기업체제로부터 이어받았다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이 기업체제의 역사적 연관에 있어 그 제도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집단’이라는 미국식 법인기업과는 구별되는 기업 조직형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집단이 연구의 분석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기업사 연구방법과 차별되는 이 논문의 연구 관점이라 하겠다.

이하에서는 해방 이전 ‘식민지 조선’에서 설립·운영된 기업들에 대한 주요 연구 쟁점을 검토하면서 연구사의 공백지점을 지적하고, 이 공백을 메울 연구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 초점은 ‘기업집단’ 프레임의 설명 적합성을 주장하고 ‘국책회사’의 역사적 역할을 복권하는 데 있다. 즉 분석 단위를 ‘기업집단’으로 새로이 설정하고, 또 ‘국책 금융기관’을 정점으로 한 기업 간 위계적 관계구조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분석 범주인 ‘개별 기업사’와 ‘산업사’ 접근으로는 포착되지 않던 기업 역사의 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연구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기업사와 사회학 연구의 접점: 국가-기업 관계의 비교역사분석

흔히 기업은 이윤 추구를 기본 목적으로 하며, 기업조직과 그 행동방식은 모두 이윤확대와 이를 위한 효율성 증대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기업은 영리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가족, 시민사회, 공공조직 등 다른 유형의 사회조직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에서 기업의 행위는 가족의 생활방식은 물론, 노동과정과 국가교육제도의 성격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은

경제적 단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단위이고, 또 자본과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행위자이기도 하다.

기업의 사회적 비중과 영향력이 이처럼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의외로 지체되어 기업조직의 오랜 역사에 비해 비교적 최근이야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이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²⁾ 사실 사회학의 전통에 있어서도 ‘회사·기업의 탄생’은 막스 베버와 같은 고전사회학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 베버의 박사학위논문은 바로 중세의 상인길드에 관한 것이었으며, 또 경제행위의 범주를 논하면서 ‘영리’ 행위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또 베버는 시장원리의 내면화와 계산적 합리성의 확산이라는 그의 핵심 테마를 설명하면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선구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신고전파 경제학이든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든, 현대경제학은 ‘효율성론(efficiency theory)’에 갇혀 있다고 비판한다. 이를 대표한 논문이 바로 마크 그라노베터의 ‘배태성(embeddedness)’에 관한 선언적 논의이다. 그라노베터는 경제행위가 사회적으로 ‘배태’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조건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같은 경제조직은 합리적 선택 과정의 총합에 의해 최고도의 합리성을 갖춘 형태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이나 조직의 관행, 정치투쟁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본다(Granovetter 1985). 그라노베터가 주장하는 것은 기업은 특정한 형태의 국가-시장-사회의 관계 속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을 단지 경제적 효율성의 관철로만 분석하는 방식은 기업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기업을 철저히 시장(market)과의 관련 속에서만 파악하며, 또 기업은 오직 전문화된 생산 단위로 설정된다. 즉, 내적 특성과 관계없이 생산만 하는 경제 단위를 기업이라고 추상화했던 것이다(Demsetz 1995).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른바 ‘신제도주의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학의 주요 연구 흐름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올리버 윌리엄슨으로 대표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수직통합을 통한 거래비용의 내부화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 사실을 이론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신제도주의의 거래비용 분석을 통해 주류 경제학-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론체계 속에서 생산과 소비를 매개하는 ‘블랙박스’로 취급되어 왔던 기업조직은 경제학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윌리엄 로이는 효율성 개념 그 자체도 역사적·사회적 구성물이라 하면서, 경제학이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전제로서는 대단히 협소한 것이라 비판하였다(Roy 1997, 8-10). 로이가 효율성론을 비판하며 주장한 것은 기업 연구에 있어 역사적 접근의 필요성이다. 그는 경제가 정치적·사회적 관계에 배태되어 있다는 그라노베터의 선언이 타당하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배태성론이 보다 이론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배태성이 구조화되는 방식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는 바로 역사적 접근을 요구한다는 것이 로이의 논점이었다(Roy 1997, 280-286).

그가 배태성의 역사적 구조화의 실증적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 것은 19세기 미국에서 비즈니스 조직이 국가에 의해 법인(法人)으로 법인(法認)되고, 이 비즈니스 법인에게 자연인에 대해서처럼 사적 소유권이 부여되는 과정이었다(Roy 1997, 10-13). 이 분석을 위해 로이가 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올리버 윌리엄슨의 거래비용경제학에 역사학적으로 토대를 제공해 준 알프레드 찬들러의 미국 법인기업사 연구였다.

찬들러가 미국 4대 모델 법인기업의 원형으로 지목하고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분석한 것은 바로 1870년 경제공황 이후 등장한 미국 철도 대기업의 형성사였다. 그는 ‘펜실베니아 철도’를 비롯한 19세기 말에 등장한 민간 철도 대화사들이야말로 향후 세계를 제패할 미국식 법인기업의 모태라고 본 것이다(Chandler 1962).

이에 대해 로이는 미국 법인기업의 역사를 살피기 위해서는 찬들러가 지목한 19세기 말이 아니라, 19세기 초라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철도회사들이 준(準)국가기업으로서 태동한 것은 19세기 초로, 미국 법인기업의 역사는 이 준국가기업으로서의 철도회사들이 정치적·사회적 투쟁을 통해 사기업으로 사유화되고, 이 과정에서 ‘법인(法人)’이라는 특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철도회사들이 준국가기업에서 사적 비즈니스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야말로 미국 기업사의 중대 국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Roy 1997, 78-83). 로이가 보기에, 찬들러의 연구가 비역사적인 것은 19세기 내내 철도에 대해 행사된 국가의 역할을 배제하고 이미 민간 법인기업으로서의

철도회사들이 확립된 19세기 말에서부터 관찰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사적 법인기업의 고향이라 하는 미국에서도 국가와 국가기업(public corporation)이 기업 및 경제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말해준다.³⁾

로이는 쉐들러가 기업은 언제나 이윤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그 조직을 개편하며, 또 효율이 가장 높은 조직형태가 바로 가장 선도적인 기업의 조직 모델이라고 주장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다지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쉐들러가 상찬한 미국식 법인기업은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선택’된 것이 아니라, 19세기 미국에서 전개된 정치투쟁과 법제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즉, 미국 정치경제의 상황조건성 속에서 역사적 우연에 의해 탄생한 것이 바로 법인기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기업이 시장이라는 경제적 프로세스에 의해 구축되었다는 것은 전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인 사후정당화라 할 수 있다(Roy 1997, 78-100).⁴⁾

이처럼 19세기 미국사에서 보듯이, 철도의 역사는 특정 지역의 기업형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기업사 연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이다. 즉 철도가 사적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지, 국영·국유기업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국가기관으로서 운영되는지는 철도산업사에만 한정되지 않는 문제이다. 쉐들러와 로이의 연구를 통해 확인했듯이, 철도기업의 조직적 형태는 자본주의화 초기 국면에서 해당 지역 경제체도의 성격 형성과 직결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프랭크 도빈(Dobbin 1994)은 주요 서구 선진국의 철도산업 형성 과정을 연구하였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의 철도산업에 관한 비교역사분석을 통해 각국의 경제와 경제정책은 시장의 합리성을 통해 수립된 것이 아니며, 또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인식 역시 국가의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를 통해 서로 상이하게 구성

3) 이 점에서 19세기 말에 출발한 쉐들러의 기업사 연구는 미국 법인기업이 사실은 국가기업으로서 출발했다는 점을 놓치고 말았다고 하겠다. 그 결과, 그의 기업 연구는 대단히 신자유주의의 국가 불개입론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효과를 갖게 되었다.

4) 발전국가를 연구한 피터 에반스는 효율성에 의한 선택이론은 다분히 사후결과를 원인에 도입한 결과론이며 동어반복(tautology)에 지나지 않는다고까지 비판하였다(Evans 1995).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로이와 도빈의 연구는 미국의 경우 철도의 사유화가 민간에 의한 철도 경영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 제도 구축 및 정치문화의 성격과 맞물려 진전되었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것에서 그 성과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법인기업(즉 주식회사)의 발달사에 대한 규명은 각 국가의 자본주의 국민경제의 형성을 탐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⁵⁾ 여기서 각국 정치경제제도에 대한 비교역사분석에 요구되는 질문이 도출된다. 즉, 왜 미국은 철도회사가 사유화되었는데 반해, 독일과 일본은 그렇지 않았나 하는 질문이다. 특히 제국주의기 일본의 철도사에서는 미국과는 반대로 주요 민영철도의 국유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적어도 기술적 효율성과 같은 요인으로는 철도산업의 민영/국영 여부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전전(戰前) 일본의 철도 국유화가 일본 본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조선의 기간 철도인 ‘경부철도’까지 묶어서 시행되었다는 사실이다.⁶⁾ 주지하다시피 경부철도 노선은 일본 민간자본이 설립한 - 물론 일본 정부의 뒷받침을 받고 있었지만 - ‘경부철도주식회사’에 의해 1904년 12월 완공되어 1905년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그 이듬해인 1906년 ‘철도국유법’을 제정하여 일본 본토 내 주요 간선철도를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아직 식민지로 법적으로 공식 편입되지 않은 조선의 경부철도까지 포함되었다. 즉 일본 민간자본에 의해 운영되던 조선의 경부철도가 통감부 철도관리국이 관할하는 일본의 국유철도가 되었던 것이다. 국유철도로서의 경부철도라는 기본적 성격은, 이후 남만주 철도회사(만철)의 위탁 경영 등 약간의 변용은 있었지만, 식민통치 기간 내내 변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산하의 관료기구인 조선철도국을 통해

5) 일본에 있어서도, 일본 경제사학의 거두인 오즈카 히사오(大塚久雄)의 주저 중 하나가 『株式會社發生史論』(『全集』 제1권)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과, 또 일본 지식권력의 자장 안에 있었던 조선-한국에서 막스 베버 연구의 기초를 놓은 오즈카는 막스 베버가 그랬던 것처럼 비(非)자본주의적 경제조직에서 자본주의적 기업조직으로의 변용, 그중에서도 주식회사의 탄생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6) 이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설명은 原田勝正(2005)의 글을 참조할 것.

경부철도를 비롯한 조선의 주요 철도를 정부 직영으로 운영하였던 것이다.⁷⁾

이렇게 조선철도는 일찍이 국유화되었고 1945년 일본 패전까지도 총독부 관료기구의 일부였던 탓에 기업사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즉 기존의 철도사 연구들은 조선철도가 총독부 관할의 국유철도라는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이 식민철도가 발휘한 수탈성을 분석하는 데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⁸⁾ 이런 탓에 일본이 왜 경부철도를 국유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논란이 되었나 하는 질문은 중심 논제가 되지 못하였다. 간단히 비교 사례를 들어 질문을 구체화하면, 일본이 러일전쟁의 승전으로 획득한 남만주철도는 국유화되지 않고 만철이라는 식민지 철도회사가 운영하였는 데 반해, 왜 조선의 경부철도는 기업조직이 아니라 국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나 하는 것이다. 더구나 조선이 비록 통감 통치하에 있긴 했지만 여전히 법적 독립국이었음에도 말이다.

경부철도의 국유화는 제국주의 열강의 철도 부설권 획득 과정과 달리,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국유철도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 경제 창출 과정이 갖는 특이성과 통감부 통치의 특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⁹⁾ 일본 본토의 철도 국유화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바 있었는데, 국유화 반대론의 대표자는 일본 재계의 막후실력자였던 시부사와 에이치(澁澤榮一)였다. 그런데 그는 경부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 경부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였다. 이 시부사와의 사례를 통해 조선 철도사에 대해 두 가지 연구 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부철도주식회사의 설립 과정 및 그 조직·자본 구성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말한 경부철도를 포

7) 경부철도를 비롯한 한국 내 철도의 국가 직영은 거의 100년이나 지속되었는데, 2005년 ‘한국철도공사’가 창립되어 마침내 국가 직영에서 공기업 위탁경영으로 전환되었다.

8) 대표적인 연구로 정재정(1999)과 高成鳳(1999; 2006)의 논의를 들 수 있다. 다만 최근의 林采成(2005)의 연구는 전시체제에 대응한 조선철도의 적극적 경영에 주목하여, 조선철도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9) 경부철도 국유화는 경부철도주식회사의 설립을 규정한 1900년 9월 법률 제87호로 공포된 ‘外國に於て鐵道を敷設する帝國會社に關する法律’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일본기업법제사 연구자인 아라키 신이치(荒木愼一 2003, 180)도 지적했듯이, 이 법률은 당시 메이지 법체계와는 상충되는 점이 많았던 문제적인 법령이었다.

함한 철도 국유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본 본토의 정치투쟁이다.

이 경부철도의 초기 역사는 ‘조선철도’가 기업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사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며, 또 국가-기업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임을 말해준다. 1900년에 일본인들이 경부철도 부설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또 5년 후 이 식민철도를 왜 국유화했으며 그 법적 논리는 어떻게 구축되었나를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와 기업 간 관계를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과 같은 정치적 스캔들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제도적이고 법적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분석 단위의 재구성: ‘기업집단’ 프레임

해방 후 한국학계의 1차적인 관심은 식민사학이 창출한 조선사-한국사의 타율성·정체성론의 극복에 있었고, 경제사 분야의 연구는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으로 집약되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검토된 것은 한국 경제의 내재적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그렇지만 ‘일제(日帝)’에 의해 억압된 ‘민족자본·기업’의 존재 유무와 그 존재 방식이었다. 이 글에서 식민지 기업 연구를 모두 검토할 수는 없고, 논지에 한해서만 간략히 그 연구사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1. 기존 연구의 분석 단위: 개별 기업과 산업

한국에서 기업사에 대한 관심은 ‘민족자본의 육성’이라는 과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른바 ‘민족경제론’이라는 타이틀로 전개된 한국 경제성장 노선에 대한 학문적 탐색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경제구조에 대한 검토 작업으로 이어졌다(瀧澤秀樹 1984). 이와 같은 문제관심은 기업사 연구에도 반영되었다. 조기준·고승제·황명수 등의 초기 기업사학자들은 식민지 조선에서 민족기업과 민족기업가의 존재 유무와 그 방식을 찾는 것으로 한국 기업사 연구의 서막을 열었다. 이들의 연구는 식민지 사회경제 구조와 기업의

역사를 상호 관련 속에서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주요 민족계 기업·기업가의 윤곽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조선인 회사기업에 관한 연구관심은 이 초기 저작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한국에서 자본주의 이행·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사실 1980년대의 식민지 기업사 연구는 본격적인 기업사라기보다는 ‘지주-소작 관계’의 해명이라는 사회사적·경제사적 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주-소작 관계의 해명은 식민지 조선의 농업·농촌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는 작업임과 동시에, 자본주의 이행의 조건과 수준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학계의 중요한 연구성과가 집중된 주제 중 하나이다.¹⁰⁾ 이는 식민지 농업 생산 및 계급구조에 관한 분석이기 때문에, 조선인 자본·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일본인 농기업도 연구 대상이 되었다. 조선 최대의 지주(地主)였던 동양척식회사는 물론, 일본민간자본에 의해 운영된 대농장(不二興業, 朝鮮興業 등)의 농업경영에 대해서는 상세한 연구가 수행되었다.¹¹⁾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이라는 관심은 공유하지만, 그 방법과 시각이 상이한 연구경향이 출현하였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 경제성장의 역사적 분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식민지배의 경험·유산과 해방 후 경제발전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려는 시각을 취하고 있다. 특히, ‘수량화’를 통한 성장 추세의 규명 작업은 일본제국주의의 ‘착취’ 속에서도 조선의 경제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 민족주의적 역사학의 주요 주장들을 계량화된 증거를 통해 반박하여 식민지경제사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불가피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¹²⁾ 하지만 식민지근대화론은 식민지 경제를 ‘시장주

10) 조선인 대지주에 관한 연구사는 홍성찬(1992)의 저서 서문에 정리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 식민지경제 연구사 정리로는 정재정의 논문(1996)을 참조할 것.

11) 東拓의 농업경영에 관해서는 김용섭(2000), 김석준(1986; 1988), 강태경(1996)의 연구가 상세하다. 不二興業에 관한 연구로는 홍성찬(1990a; 2007)의 연구가 있으며, 朝鮮興業에 관한 연구로는 윤수종의 논문(1988)이 있다. 최근 不二興業을 비롯한 전북지역 식민지 농업에 관해서는 홍성찬 외(2006), 정승진·마츠모토(2005)의 연구가, 조선농업에 대해서는 하지연의 연구(2010)가 있다.

12) 기본관점에 대해서는 안병직 편(2001)의 서문을, 이론적인 입장 정리는 김낙년의 논문(2003; 2007)을 참조할 것. 한편,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경제학적 방법을 통한 비판은 허수열의 연구(2005; 2011)가 대표적이다.

의'의 원리로 접근한다. 즉, 주류경제학에서 하는 것처럼 시장을 제외한 다른 요소(식민지 정치권력, 식민지 사회)를 외생변수로 취급하고, 식민지 경제를 '자본-시장-개인'의 관계로 분석하는 것이다.¹³⁾

사실 한국에서 식민지 기업 연구는 카터 에커트(Carter Eckert)의 『제국의 후예』에 의해 자극받은 바가 크다. 에커트는 '민족기업상(民族企業像)'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민족주의적 경제사 연구에 있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한국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전(前)근대적 지주가 토지경영의 혁신을 통해 근대적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으로 고창 김씨가의 지주경영과 경성방직의 설립을 분석하려 했던 기존 한국학계의 연구들을 부정하면서, 경성방직이 조선총독부와 밀착된 비(非)근대적인 '정상(政商)' 기업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한동안 한국의 식민지 기업사 연구는 '민족기업'의 존재방식을 둘러싸고 그 연구관점이 양분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지평이 대폭 확대되어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고 있다.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재조(在朝) 일본인 연구의 활성화와 연동하여, 조선에서 활동하면 일본인 소유 기업에 대한 연구들이다.¹⁴⁾ 그동안 농기업 연구를 제외하고는 일본인 기업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축적되지 않았지만, 사실 식민지 조선의 경제에 대해서는 '민족계 기업'보다는 일본계 기업의 영향력이 더 컸다. 고바야시 히데오가 일찍이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이 일본계 기업이 총생산과 자본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월등하였으며, 조선총독부의 경제정책도 일본계 기업·자본의 조선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小林英夫 1983). 이렇게 볼 때 식민지 기업사 연구는 '민족자본론'의 관점¹⁵⁾을 넘어, 식민지 조선의 '세계' 전체를 조망·분석

13) 이 입장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연구로는 주익종의 논문(2003)을 들 수 있다.

14) 북부조선 공업화의 계기가 되었던 '일질(日窒)'의 조선질소비료에 대한 연구들을 필두로, 최근에는 일본계 자본의 조선 활동에 대한 연구들도 축적되고 있다. 제조 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규수(2007)의 책과 김명수의 논문(2006)을 참조할 수 있다.

15) '민족자본론'의 자장 속에서 식민지 기업사를 분석한 연구들도 일부 존재한다. 이 연구들은 계급분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조직과 운영보다는 기업가와 그 사회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미일(2015)은 '토대-상부구조론'에 입각하여, 조선인 자본가 계급의 경제적 기초와 정치사회적 활동이 갖는 계급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승렬(2007)은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과 '민족자본론'을 계승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형성에 대한 또 하나의 접근법으로 산업사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면방직업은 광범위한 미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화 초기에 발전하는 산업으로, 식민지 조선에서도 일찍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면방직업의 이러한 역사적 특징으로 산업사 연구의 상당 부분은 면방직업 등 섬유산업의 양상을 규명하는 데 할애되었다.¹⁶⁾ 최근에는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기전력사, 조선(造船)산업사, 철강산업사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¹⁷⁾

이처럼 식민지 기업사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은 크게 ① 기업가 개인에 관한 연구(여기서는 논지 전개상 생략하였다), ② 개별 기업사 연구, ③ 산업사로의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 세 방식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모색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진석(2006)은 ‘경성전기’라는 개별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력업이라는 산업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산업사·철강산업사 연구들도 개별 기업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 분석 시야를 산업사에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개별 기업사의 관점으로도 또 산업사의 관점으로도 포착되지 않는 기업사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업집단’을 구성하고 있던 일련의 기업군의 존재이다.

2. ‘기업집단’이라는 프레임: 식민지 기업의 존재 방식

한국에서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상호출

국가와 자본의 결합이라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의 특수성을 논의에 끌어들이 한국 부르주아의 형성과 그 성격을 해명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사에서 초기 회사 기업의 형성에 대해서는 전우용(2011)과 김재호(1999; 2002; 2005)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 16) 주요 연구로는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초기 연구를 필두로, 권태억, 주익중, 권혁태, 배성준, 서문석, 정안기 등의 연구가 있는데, 연구자 별로 입장이 다른 바가 있다(세부 서지사항은 생략함).
- 17) 전기전력사 연구로는 김경림과 오진석의 일련의 연구가 있고, 조선산업사는 배석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세부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목록을 참조할 것).

자제한' 조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호 출자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사실 이는 '재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기업집단'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해체된 자이바츠(財閥)의 재생 형태인 '系列'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자이바츠는 대개 가문 소유의 상인조직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지주사(持株社)인 모회사가 출자를 통해 다수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배하는 일본 특유의 기업조직을 말한다. 제국주의 일본의 자이바츠는 지주사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회사를 설립·운영하였는데, 이들은 산업상 서로 연관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국 법인기업이 관련 사업부문이나 관련 회사를 수직계열화한 데 반해, 일본의 자이바츠는 서로 거래 관계가 거의 없는 회사들까지도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기업군으로 만든 것이다.

자이바츠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대규모 기업군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핵인 모회사-지주사는 특정 가족 혹은 가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벌기업 전체가 한 가족·가문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점이다. 연합국총사령부에 의해 자이바츠들은 해체되었지만, 자이바츠들은 법망을 피하가면서 다시 뭉치게 되었다. 이를 게이레츠(系列)¹⁸⁾라 하는데, 법적으로는 서로 연관이 없는 회사이지만, 인적·물적 관계망을 통해 예전의 자이바츠와 유사한 형태의 관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石川健次郎 1989; 정진성 1992).

그런데 일본에서 자이바츠는 게이레츠로 변모한 반면,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재벌'로서 오히려 더 '완숙하게' 발전하였다. 한국의 재벌은 지주회사가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기업 간 상호 출자라는 합법적 방법을 통해 자이바츠의 적자(嫡子)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특정 가문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지배구조를 갖게 되었다.

일본-한국-대만의 기업은 미국식 수직계열화 법인기업이나 영국식 네트워크형 가족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질을 가지며, 이러한 형태적 특질은 3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시

18) 일본에서는 '系列'을 '기업집단'이라 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라노베터의 용법에 따라, 또 그의 'business group'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전후(戰後) 일본의 기업집단을 '系列'로 지칭한다.

말해, 특징적인 기업 형태가 고도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인식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관심의 초점은 주로 일본-한국-대만의 기업조직에 있어 나타나는 차이점에 두어져 있었다.¹⁹⁾

이에 반해 마크 그라노베터는 그 공통점에 더 주목하여, 이를 한데 묶는 틀로서 ‘business group’을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business group’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함께 묶여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리된 기업의 집합을 뜻한다. 그라노베터는 일본, 한국, 대만의 기업조직을 검토한 후, 이 3국의 기업조직 형태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business group’을 구성하여, 서로 연관이 없는 기업들도 협력을 주고받으며, 또 일관된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Granovetter 2005).

하지만 ‘business group’이 그라노베터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프레임인 것은 아니며, 또 일본 특유의 기업조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구 기업사 연구들은 법인기업 중심의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도리어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소유주의 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business group’이 후발국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가족자본주의에서 주주자본주의로 단계적으로 발달하고 그에 상응하여 기업조직이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발달된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여러 형태의 기업조직이 병존하고 있으며, 도리어 가족 소유 중심의 ‘business group’이 지배적인 기업 형태라 봐야 한다는 것이다 (Morck & Steier 2007, 31-35).

이 ‘business group’에 주목하는 것은 기업분석에 있어 사회학적 접근 방식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도 물론 기업조직을 연구하지만, 사회학자들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기업들’을 연구한다. 사회학자들은 단일기업에서 집합적 기업군으로 관심의 초점을 이동시켜 오고 있는 것이다. 스웨드버그는 사회학적 기업 연구의 원칙 중 하나로 “주류경제학에서처럼 단일기업이나 대표적 기업이 아니라, 복수(複

19) 예를 들면, 핫토리 타미오의 『개발의 경제사회학』(2007)은 3국의 가족제도의 상이한 전통이 기업조직에 미친 차별적 영향을 분석한 흥미로운 논의이다. 그리고 장덕진(2001)의 연구도 가족구조가 한국·일본·대만의 기업조직의 규범적 동형화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3국의 가족구조와 기업조직의 연관을 비교하였다.

數)의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wedberg 2003, 98-99). 그라노베터가 말한 ‘business group’만이 아니라, 조직이론의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 개념과 경제사회학의 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 등은 기업들의 관계와 그것을 둘러싼 장(場)에 주목하는 사회학의 접근방식을 잘 보여주는 접근방식이다.

‘business group’(이하 ‘기업집단’으로 번역)이라는 프레임은 개별 기업이나 분야별 산업사로는 포착할 수 없던 기업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즉 다각화경영 기업을 전체로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기업집단 프레임이 갖는 장점이자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의 재벌그룹이 그러한 것처럼, 전전(戰前) 일본의 자이바츠는 산업적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이 묶여서 하나의 기업군을 구성했다는 점을 주된 특징으로 하였다.²⁰⁾ 이는 미국식 법인기업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기업통합 방식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기업 형태라 할 수 있다.

그간 식민지 조선의 기업에 대한 연구들은 개별 기업가나 개별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그것의 민족적 혹은 매관적 성격을 판별하거나, 전력업이나 면방직, 철강과 조선 등 각 산업의 역사를 가지고 식민지 경제의 수탈 과정이나 자본축적 과정을 규명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당시 기업들이 설립되는 방식이나 운영되는 범주와 엮나가는 측면이 적지 않다. 식민지배기에서 유래했음을 부정할 수 없는 현대 한국의 재벌들을 개별 기업 단위나 산업 단위로 분석했을 때, 재벌들이 산업적 연관이 없는 개별 사업 기업들을 소유구조의 정점에 있는 가문이 지배하여 묶어 운영하고 있는 그 특유의 구조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식민지 기업들도 결코 개별 기업 단위나 부문 산업 단위로는 포착할 수 없는 기업집단으로서의 소유·경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동아시아 대기업들이 공유하고 있는 구조는 바로 국가의 법적 보증과 국책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도 기업사 연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다.

식민지 기업의 존재 방식이 이러했음에도 그간 기업집단이라는 프레임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 일본 특유의 기업 형태로서 특수한 사례로 취급되었던 감이 있고, 또 전후 ‘재벌 해체’에서 보듯 결국 소멸될

20) 일본 ‘기업집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시모토와 타케다의 책(1997)을 참조할 것.

기업형태로 암묵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²¹⁾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반하는 사례이며, 도덕적 정당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 미국식 법인기업에 뒤지는 것이거나, 혹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기업집단은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일반사회에서 그것에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 스웨드버그는 ‘기업집단’이라는 개념이 법적 제한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 하였다(Swedberg 2003, 100).²²⁾

그라노베터가 ‘기업집단(business group)’을 경제 분석의 핵심 단위로 설정한 것은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체제가 미국식 법인기업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기업 형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의 연구 시야가 1945년 이후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기업집단 프레임은 식민지 기업의 존재 방식을 분석하는 데에도 정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기업집단 프레임을 통해 기업사 연구에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연구 영역을 제시해 보겠다.

IV. 분석 대상과 쟁점의 확장: 회사법제·홀딩컴퍼니·국책회사

기업집단이라는 기업사 연구의 프레임을 통해 기존 연구와는 차별되는 대상과 쟁점을 구성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축은 회사법제에 대한 연구

21) 한국 기업사 연구에서 ‘기업집단’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는 김성수(1998)의 논문이 있는데, 그 후속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듯하다. 한편, 한국 기업 연구에서 기업집단 프레임이 갖는 유용성에 관해서는 김은미 외(2005)의 서문을 참조할 것.
22) 미국에서는 일찍이 ‘반(反)독점법’을 중심으로 하여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금지해 왔기 때문에, 일본식의 기업집단과 같은 기업 형태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챌들러가 찬미한 수직계열화와 사업부제는 거대 독점기업의 등장을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제어하고 있던 미국의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기업의 자본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택지 중의 하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와 기업 형태에 대한 연구의 두 가지 제도적 문제로 설정된다. 그리고 그에 더해 기업집단의 자금 운용을 뒷받침하는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을 또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식민지 회사법제와 기업 형태에 대한 분석은 재무구조나 경영조직 등을 분석한 경영학적·경제학적 회사기업 연구나 혹은 ‘수탈’과 같은 기업의 사업 내용이 식민지 사회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역사학적 회사기업 연구가 충분히 조망하지 못한, 그렇지만 식민지 기업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 영역이라 할 것이다. 이하, 기업집단 프레임과 연관하여 도출되는 식민지 기업 연구의 대상과 쟁점은 아래와 같다.

1. 식민지 회사법제: 기업의 법인격과 ‘회사령(會社令)’

법은 경제현상의 유기적 일부일 뿐만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경제현상에서 비(非) 법적인 부분을 분리시킬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제현상과 법은 분리될 수 없다. 기업의 형태와 활동은 시장과 효율성만이 아니라, 상법(과 회사법)을 비롯한 법률에 의해서도 규정되고 제한된다. 사실 법률은 시장 혹은 경제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기업의 조직적 성격을 창출해내는 제도이다. 서구에서의 상법의 변화는 기술혁신과도 비견될 수 있는 것인데, 상법은 자본주의의 법적 기초를 구성하는 일련의 제도들, 즉 은행, 화폐, 주식회사를 창출해냈기 때문이다 (Swedberg 2003, 189-192).

이 중에서 법인기업, 즉 주식회사(corporation)는 무엇보다 법(法)이 만들어낸 소유권 제도이자 경제조직이다. 법인(法人)으로서의 주식회사는 회사법이 제공하는 법적 기초(즉 法認) 없이는 탄생할 수도 없었고, 존립할 수도 없는 법적 인공물(artifact)이다. 윌리엄 로이에 따르면, “법인은 국가로부터 차터(charter)를 받았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체로 특권이였다(Roy 1997, 12). 법인은 국가의 법제화가 없이는, 다시 말해 국가권력의 법적 인정 없이는 존재할 수도 지속될 수도 없는 조직 형태라는 것이다. 법인 중에서도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법인(주식회사)은 그 자체로 특권적 법률(법인임을 인정하는 차터를 부여)로 구성된 것이며,

그 내적 구조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제도(국가와 법)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 법적 특권이라는 것은 소유권(혹은 재산권)이 법률에 의해 자연인의 소유권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에 부여된 소유권이 특권인 것은 바로 ‘유한책임’을 국가가 법으로 인정했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유한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법제화된 차터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기업의 고향인 미국에서도 19세기 말 이전에는 교회나 학교와 같이 공공적 사업을 하는 단체에만 법인이라는 차터를 부여하였다.²³⁾ 그래서 비즈니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큰 정치적·사회적 논쟁을 불렀고, 치열한 정치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객주주의자들은 비즈니스 기업이 법인이 되는 것은 공공성과는 관계없는 사적인 일에 특권을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무한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회사가 유한책임하에서 법인이 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정의를 해친다고 본 것이다.²⁴⁾ 이처럼 법인기업은 찬들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기업 형태였기 때문에 탄생하였고, 또 지배적인 기업 형태가 된 것이 아니다. 특권을 부여받기 위한, 혹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격렬한 정치투쟁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법인기업이다(Roy 1997, 41-77).

주식회사는 이처럼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탄생한 법적 인공물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 회사법제사 검토를 통해 그 발달사를 추적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즉 주식회사의 제도적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변천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기업 제도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학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바로 ‘회사령’이다.²⁵⁾ 그간 한국학계에서는 손정목(1984)의 연구가 잘 보여주듯이, 조선총독의 제령(制令)으로 반포된 회사령에서는 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해 조선총독의 인허가주의를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23) 미국 최초의 법인은 바로 하버드대학이다.

24) 프랑스에서는 혁명 기간 동안 법인 개념이 법에서 제거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Swedberg 2003, 209).

25) ‘회사령’ 이외의 식민지 회사법제에 대해서는 전쟁 동원에 대한 관심에서 전시통제제법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김인호 1998; 배성준 2001).

총독이 인가를 내준 조선계 회사·기업의 수가 적었다는 사실을 들어, 회사령은 조선계 기업의 설립을 막아 민족자본의 형성을 저지하려 한 악법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본토에서는 시행하고 있던 회사 설립의 준칙주의를 규정한 상법 회사편을 조선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일본에서는 상법 회사편에 규정된 다소 복잡하지만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 설립의 법적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데 반해, 회사령의 인허가주의로 인해 조선에서는 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조선총독의 절대적 권한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차별로 연결되었다는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고바야시 히데오는 조선총독부가 조선계 기업에 대해 좀처럼 인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조선 투자를 원하는 일본계 기업에 대해서도 인가를 거부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한국학계의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였다(小林英夫 編 1994). 즉 고바야시는 회사령을 통한 인허가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족별 차이는 있지만 회사령이 유독 조선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

회사 설립의 인허가를 규정한 회사령은 그 자체로 차터를 명시한 법령이다.²⁶⁾ 조선총독부는 그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특정한 기업에게만 설립과 운영의 차터를 부여했고, 이 차터를 교부 받은 기업만이 법인으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령의 분석 대상은 조선총독부가 왜 차터라는 초기 자본주의적 제도를 도입하였고, 또 차터 교부의 심사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하는 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회사령을 통한 차터 교부의 과정과 논리보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회사령의 인허가주의가 갖는 특징을 명확히 규명하지

26) 현대 준칙주의 시대에 ‘차터’라는 것은 다소 낡은 제도이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면세점 운영 신청을 한 업체들에 대해 내린 조치를 보면 차터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면세점 운영 면허 갱신 공고를 내고,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 요건 심사를 하여 그중 특정 몇몇 업체에만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특허’를 부여하였다. 신청한 업체들은 모두 면세점 영업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비공개 내부 심사를 통해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영업 허가라는 특허를 내준 것이다. 이 특허 부여는 조세 부과가 국가의 권리이므로 이를 면해주는 것도 역시 국가의 권한이라는 논리에서 나온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차터와 관련된 기업의 역사를 검토해 보면, 국가권력이 기업에 차터를 부여하는 것은 특정 사업에 대한 독점을 보장해야 하거나 혹은 투기꾼·사기꾼이 무질서하게 시장에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회사법의 발달사에 대한 연구들은 경제의 고도화와 복잡화가 진전되면 회사법은 자연스레 인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²⁷⁾

2. 지주회사(홀딩컴퍼니)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윌리엄슨과 첸들러가 조직 효율성을 고도화하는 노력의 결과로 설명한 거대 법인기업은, 무엇보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등장할 수 있었다. 막대한 자본과 자산을 가진 생산기업이 전방으로는 원료·부품 공급 기업들을, 후방으로는 유통·판매 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원료·부품 조달-조립·생산-유통·판매’에 이르는 전(全) 과정을 위계화된 기업조직 구조 속으로 결합·통합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해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산업 간 연계가 긴밀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 간 인수합병을 국가가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른 방식을 택하였는데, 그것은 대기업의 합병 방향이 미국에서처럼 수직으로 제한되지 않고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를 갖는 것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 피라미드형 기업 지배구조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이 바로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였다.

일본의 자이바츠와 같은 기업집단은 비공식적 연계에 의해서 기업군을 구성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의 배타적 지배권을 정점으로 한 위계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은 식민지 기업 연구에서 충분히 분석되지 못한 지점이다. 제국일본의 기업사는 이 지주회사 제도를 빼놓고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당시는 지주회사가 허용되어 있었으며, 또 미쓰이·미쓰비시·쓰미토모 등 일본의 주요 ‘財閥’들이 지주회사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 일본 본국만이 아니라 식민지의 경제까지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

27) 학자에 따라 특허주의를 인허가주의에 포함시켜 ‘인허가주의-준칙주의’의 2단계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특허주의와 인허가주의를 다른 것으로 보아 ‘특허주의-인허가주의-준칙주의’의 3단계로 회사법의 발달사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본제국의 경제권의 기업사를 볼 때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지주회사는 오로지 자금의 조성과 출자만을 목적으로 한 ‘순수지주회사’와 특정한 사업의 총괄을 위해 설립된 ‘사업지주회사’로 나뉜다. 일본 자이바츠의 경우 순수지주회사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형태였는데, 이는 특정 가족이나 가문에 의해 소유되어 있었다.

‘시부사와 자이바츠(澁澤財閥)’를 예로 들어 보자. 시부사와 가문은 대(對) 조선 사업을 활발히 펼친 대표적인 식민기업가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이 설립되기 전, 시부사와 자이바츠의 주력 기업이었던 다이이치은행(第一銀行)은 민간은행이었음에도 국고출납을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일은행권(第一銀行券)’을 법정통화로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 은행을 중심으로 시부사와 자이바츠는 민간 농기업으로서는 조선 최대급이었던 ‘조선농업’을 경영하였고, 또 경부철도·경성전기 등 조선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굵직한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도 하였다. 이 기업들은 일본의 다른 재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부사와 동족회(澁澤同族會)’라는 이름의 가문 구성원만으로 구성된 ‘순수지주회사’가 전사(全社)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 산하의 각 회사들은 법적으로는 별개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소유 가문의 통제하에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연동하고 있었다. 일본 자이바츠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부사와 자이바츠의 각 식민지 기업들은 지금까지 따로따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조선계 제일의 기업가인 김성수 가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김성수·김연수의 고창 김씨 가문이 소유한 기업은 주력 회사인 ‘경성방직’에 그치지 않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경방’을 비롯하여 삼양사·동아일보·남만방직 등이 있는데, 이들은 산업기술적 연관성은 약하지만, 경영의 측면에서는 오너 일가를 정점으로 하여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예를 들어 김성수는 경성방직에 조선총독부가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기 위해 『동아일보』의 사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에커트 2008; 지수걸 1994). 따라서 김성수 가문의 기업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성방직이나 삼양사만 독립적으로 보서는 안 되고, 이 기업군의 전체적 움직임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식민지의 유력 기업들이 가족 소유의 순수지주회사의 지배력을 중심으로 그 산하에 산업적 연관성이 없는, 그리고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된 다수의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간 식민지 기업의 조직구조를 지주회사 단위로 분석하지 않았던 것은, 자료 접근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전후(戰後) 지주회사 제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크게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전후 일본에서 자이바츠들은 국가와의 공모를 통해 성립한 독과점 기업으로서, 새로이 탄생될 전 지구적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것이며, 또 전체주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해체되었는데, 이는 자이바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순수지주회사를 법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자이바츠 기업집단의 인적·금융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단행되었다.²⁸⁾ 게다가 한국은 지주회사가 문제가 되었던 일본보다도 더 그에 대한 금지가 가장 강력했었다.²⁹⁾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조건으로 인해, 식민지 기업을 연구할 때 지주회사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 장애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1945년 이전 일본 기업집단 구축의 대표적 제도였던 지주회사는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금압되었지만, 지금 다시 자본 축적의 최신 버전으로 재생되고 있다. 신자유주의화가 전개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해금(解禁) 압력이 증대하여 일본에서는 1990년대 무렵에 들어서면서 단계적으로 ‘지주회사 금지’가 완화되기 시작했고,³⁰⁾ 가장 강력히 지주회사를 금지했던 한국에서도 마침내 금융업에 한해서는 순수지주회사가 다시 허용되었다. 지주회사의 부활은 식민지 기업사 연구가 단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명백한 현실로서 보여주고 있다.

28) 일본의 경우, 자이바츠가 해체되면서 순수지주회사들은 은행과 같은 전문 금융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은행이 금융업 이외의 다른 사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금산(金産)분리는 이 과정을 법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9) 한국은 지주회사 금지법이 일본보다 더 강력한 사례로, 특히 전두환 정부 시절 더 강화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30) 일본 지주회사 ‘解禁’에 관해서는 신장철(1998)의 논문을 참조할 것.

3. ‘국책회사’를 정점으로 한 금융 위계구조

지주회사는 ‘財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요 국가기업도 갖고 있던 기업 형태였다. 특히 식민지 개발 자본을 공급한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와 같은 국가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업-지주회사’의 관점이 필수적이다.³¹⁾ 당시 일본에서는 자본의 공급이나 경제통제를 위해 국가가 설립한 기업을 ‘特殊會社’라 하였다. 일본제국의 식민지에는 만철과 동척을 필두로, 특수회사가 다수 설립되어 식민지·점령지의 경제를 ‘개발’ 혹은 ‘통제’하였다. 이 식민지 국책회사들은 고유의 직영 사업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은 바로 식민지 경제지배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공급하는 데 있었다.

일본 식민지 국책회사를 대표하는 만철은 남만주지역의 철도를 운영하는 것을 직영 업무로 하면서 그와 동시에 만주 경제 침략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즉 만철은 국책사업 대행기관이면서 국책 금융기관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자금 공급 기능은 대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식 인수 등의 투자활동까지 포함하였다. 만철은 식민철도를 운영하면서 자본 투자를 통해 수십 개의 자회사·투자회사·관계회사를 거느린 거대 콘체른 조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국책회사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활발히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식산은행이다. 식산은행은 조선 산업금융의 중추로 대부를 통한 자금 공급이라는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스스로 출자를 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배구조를 통해 조선식산은행은 이른바 ‘殖銀 콘체른’을 구축하여 식민지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식산은행은 조선총독부의 주선·알선을 통해 조선에서 영업하던 기업들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공급하였다.

31) 조선은행에 관한 연구로는 오두환(1998)과 조명근(2009)의 연구가 있다. 일본에서는 『朝鮮銀行史』(1987)가 간행된 바 있다. 조선식산은행에 관해서는 홍성찬(1990b), 배영목(1992), 정병욱(2003; 2004), 선재원(2010) 등의 연구가 있다. 東拓을 기업사적 관점을 반영하여 한 연구로는 안병태(1982), 김석준(1986; 1988), 강태경(1993), 손경희(2002), 그리고 신용하의 연구(2008)가 있다. 일본학계의 최근 연구로는 河合和男 外(2000)와 黒瀬郁二(2003)의 저작이 있다.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에서 ‘돈줄’을 쥐고 있던 식산은행의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식산은행은 조선총독부와 개별 기업을 금융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조선 금융망의 위계에서 정점에 위치하고 있던 존재였다.

또 하나의 강력한 국책-금융지주회사는 바로 동양척식회사이다. 1908년에 설립된 ‘東拓’은 원래 일본인 농민을 조선 농토로 이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민회사로, 이주한 일본 농민에게 양질의 농지를 불하해 주기 위해 조선의 농지를 대량으로 보유하였다.³²⁾ 그런데 동척은 1917년 법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로서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³³⁾ 동척은 모회사로서 출자를 하여 필요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 인수를 통해 주요 주주가 되기도 하였다.³⁴⁾ 동척의 관계회사(자회사와 투자회사)는 85개사에 이르렀으며, 그 영업 지역은 조선-만주-중국-남양군도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식산은행이나 동척을 개별 기업사만으로 보거나 산업사만으로 접근해서는 그 전모를 이해할 수 없다. 식산은행은 식민지 경제에 대출을 통해 자본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인수 등의 투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운영하기도 한 지주회사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척 역시 토지농업회사로서만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측면도 함께 봐야만 한다. 동척의 두 측면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봐서는 식민지 투자회사로서의 동척의 전모와 특징을 이해할 수 없다.³⁵⁾

이렇게 식민지 금융투자-지주회사로서 동척을 이해하게 되면 연구의 시야를 크게 확장할 수 있다. 한국학계에서는 흔히 동척을 조선 토지농업수탈 회사로만 연구해 왔다. 이는 동척에 대한 기업사적 분석보다는 ‘일제의 가혹한 토지 수탈’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32) 동척의 조선 이민사업에 관해서는 최원규(2000), 君嶋和彦(1976)의 연구가 있다.
 33) ‘동척법 개정’에 관해서는 黑瀬郁二(2003)의 연구가 상세하다.
 34) 국책 금융기관으로서 동척의 투자 활동에 주목한 것은 김호범(1997)의 연구가 있었는데, 최근 배석만(2014b)이 전시체제기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바 있다.
 35) 지주회사로서 동척을 바라본 것으로는 黑瀬郁二(2003)와 신용하(2008)의 연구가 있다. 구로세는 동척의 지주회사로서의 측면을 정밀하게 분석·제시했지만, 조선에서의 토지농업사업이 빠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신용하는 동척을 ‘식민지투자회사’로 봐야지만 동척의 대(對)식민지 이민-농업-산업개발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여, 동척의 전모를 이해할 열쇠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접근은 동척의 일면만 보는 것이다. 동척은 ‘동척법 개정’을 통해 조선에만 한정되어 있던 영업범위 제한에서 벗어났다. 법개정으로 동척은 일본의 공식·비공식 세력권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핵심대상지는 바로 ‘만주’였다. 동척법 개정은 만주 침략의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동척을 만주에서 활동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척을 전체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내(朝鮮 內)’ 토지사업만이 아니라, 동척법 개정 이후 전개된 ‘조선 외(朝鮮 外)’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며, 또 조선사업과 조선외 사업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³⁶⁾

식민지와와의 각별한 관계는 이들 국책회사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전후(戰後) 일본에서는 연합국총사령부(GHQ)에 의한 ‘財閥 해체’와, 또 다른 기업집단 형태인 ‘系列’의 형성 등으로 ‘財閥’과 ‘系列’에 대한 일본학계의 연구가 크게 진전되었지만,³⁷⁾ 그 시야는 식민지에서의 투자·영업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전후 일본의 영토 내부로 한정되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의 3대 자이바츠³⁸⁾와 신흥 자이바츠들³⁹⁾은 식민지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1930년대 이후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본 ‘財閥史’에서 식민지와의 관계가 빠져 있다면 결코 충분한 연구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6) 조선-만주 관계를 시야에 둔 또 다른 연구로는 오두환(1998)의 조선은행에 관한 논문이 있다. 이 연구는 식민지 조선의 중앙은행으로만 알려져 있는 조선은행이 사실은 1920년대에 만주에 진출하여 치열한 통화전쟁을 벌인 식민은행이라는 점을 밝힌 귀중한 연구이다.

37) 일본 ‘財閥史’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石川健次郎(1989)와 宮本又郎(2003)의 논의를 참조할 것. 한국학계에 소개된 전전 일본 재벌에 관한 연구로는 安岡重明(1989)의 연구를 들 수 있고, 일본의 전전 기업사 연구의 동향을 정리한 것으로는 여인만(2014)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38) 만주를 비롯한 식민지에서 일찍부터 활동한 대기업으로는 ‘大倉組’가 있었지만, 전시체제 하에서는 미쓰이·미쓰비시·쓰미토모도 식민지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39) 일본질소콘체른(日窒)은 1920년대 조선 북부지역에서의 전력·화학 공업 투자를 통해 급성장한 대표적인 신흥 재벌이다. 만주국에서는 닛산(日産)이 본사를 이전하여 설립한 만주중공업주식회사(즉, 滿業)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V. 맺음말: 기업사 연구의 재정향

이 글은 마크 그라노베터가 제안한 ‘기업집단’ 프레임으로 접근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기업 연구의 대상과 쟁점을 식민지 경제지배의 문제와 연관하여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중심축을 이루는 논제는 바로 국가와 기업의 관계이다. 그간 식민지 기업 연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회사법제의 문제를 필두로, 지주회사를 중핵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또 이 지주회사에 자본을 공급하는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 등의 연구 문제들이 기업집단 프레임을 통해 도출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식민지 경제사·기업사 연구에 있어 이 글에서 제시한 ‘국가-기업’ 간 위계적 관계는 그 배면에 깔린 숨은 전제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제 지배의 양상과 그 영향을 분석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식민국가’의 움직임이다. 조선총독부의 통치 행위는 조선계든 일본계든 조선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기본적인 요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부의 경제적 권력과 통제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식민지 경제사·기업사 연구의 핵심 과제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 ‘국가-기업 관계’로 연구 관점을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석 지점으로 설정한 것은 바로 ‘관계’이다. 즉 양자의 상호작용이 형성되고 지속되는 과정과 그 논리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민권력의 법적·제도적 행위가 식민지 기업들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의 관계를 ‘국가→기업’의 일방향적인 것으로만 분석해서는 도리어 식민지 경제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은 ‘이윤의 추구’라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이다. 기업이 아무리 국가와 결탁해 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이윤의 추구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때때로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기업 조직의 안팎에서 관련 행위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또 이에 대한 조정이 진행된다. 이 갈등과 조정의 과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국면으로 바로 전시체제하의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국가는 기업에 대해 이윤의 추구를 중단하면서까지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물자 생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결국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생산을 늘린다면 그 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군수 생산을 위해 기업을 필요로 함에도 그것이 역으로 기업의 도산을 부르는 이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가와 기업 간 관계의 핵심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 갈등을 조정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에서 바로 ‘기업사’라는 분야가 갖는 내적 긴장감이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사 연구가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서 확립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와 기업이 맺는 관계의 구조변동을 고려하면서도 기업 자체가 갖는 독자적인 원리를 사상(捨象)하지 않아야 한다. 테다 스카치폴(Skocpol 1985)이 주장한 것처럼, 경제체제 분석에 있어 국가를 복권하되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절대적인 것으로 상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대로, 서두에 제시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사회와 절연된 채 시장적 효율성만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상정해서는 기업의 다면적인 특징을 결코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 제안한 ‘기업집단’ 프레임은 국가-기업 간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바로 ‘이권의 교환’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한다.⁴⁰⁾ 특정한 개별 기업이 전쟁 수행을 위해 이윤을 포기해야 할 때 국가는 그 기업집단에 포함된 다른 기업 혹은 사업 부문에서 손실을 벌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기업집단의 입장에서는 기업집단 전체 수준에서 수익과 이익이 보장된다면 특정한 산하 기업의 적자와 손해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박정희 정권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을 회사 스스로 부담하였지만, 그 때문에 결코 도산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그룹’의 탐-매니지먼트 수준에서 손실과 이익의 교환을 국가와 조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었다.

40) 기업사 연구의 핵심 과제가 국가와 기업 간 ‘이권의 교환’ 문제라는 점을 필자에게 환기시켜 준 것은 기미지마 가즈오(君島和彦) 교수이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 강태경 (1993).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조선경제수탈과 금융업경영.” 『경영사학』. 제8호, pp. 281-313.
- _____ (1996).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수탈경영.” 『경영사학』 제13호, pp. 245-266.
- 김경림 (1996). “일제 말 전시하 조선의 전력통제 정책.” 『국사관논총』. 제66호, pp. 149-180.
- _____ (1997). “식민지 조선 전기사업의 발흥.” 『梨大史苑』. 30호 pp. 101-133.
- _____ (1999). “식민지 시기 독점적 전기사업체제의 형성.” 『梨大史苑』. 32호, pp. 187-229.
- _____ (2001). “식민지기 조선의 독점적 전기 공급구조와 공업구조의 기형화.” 『이화사학연구』. 제28호, pp. 231-256.
- 김낙년 (2003). “식민지기 조선 공업화에 관한 제 논점.” 『경제사학』. 제35호, pp. 29-61.
- _____ (2007). “‘식민지 근대화’ 재론.” 『경제사학』. 제43호, pp. 155-188.
- 김명수 (2006). “일제하 일본인의 기업 경영: 朝鮮勸農株式會社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6호, pp. 125-154.
- 김석준 (1986).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업 전개 과정.”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한국근대농촌사회와 일본제국주의』. 문학과지성사, pp. 81-145.
- _____ (1988).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농장 확장과 그 경영 형태.” 『한국의 사회와 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125-176.
- 김성수 (1998). “일제하 민족계 기업집단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특히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경영사학』. 제17호, pp. 5-35.
- 김용섭 (2000).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한말·일제하의 지주제와 농업문제』. 증보판. 일조각.
- 김은미·장덕진·Mark Granovetter (2005). 『경제위기의 사회학: 개발국가의 전환과 기업집단 연결망』.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인호 (1998). “일제 말 조선에서의 ‘군수회사법’ 실시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호, pp. 256-283.
- 김재호 (1999). “개항기 원격지 무역과 ‘회사’-대러시아 무역과 경성천일회사.” 『경제사학』. 제27호, pp. 75-113.
- _____ (2002). “상회사의 특권과 지대추구, 1876-1904.” 『경제사학』. 제32호, pp. 65-94.
- _____ (2005). “기업의 발흥과 관료, 1895-1910.” 『경제사학』. 제39호, pp. 61-94.

- 김호범 (1997).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금융활동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6권, 1호, pp. 103-135.
- 배석만 (2014a). 『한국 조선산업사: 일제시기 편』. 선인.
- _____ (2014b). “전시체제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금동원 구조와 투자동향 분석.” 『지역과 역사』, 제34호, pp. 279-316.
- 배성준 (2001). “일제 말기 통제경제법과 기업통제.” 『한국문화』, 제27집, pp. 363-395.
- 배영목 (1992). “조선식산은행과 농업.” 『국사관논총』, 제36호, pp. 173-215.
- 선재원 (2010). “한국 화이트칼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조선식산은행(현 한국산업은행)의 사례, 1918-1953.” 『경영사학』, 제56호, pp. 97-112.
- 손경희 (2002). “1920년대 경북지역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일본인 농장 경영.” 『계명사학』, 제13호, pp. 23-57.
- 손정목 (1984). “회사령 연구.” 『한국사연구』, 제45호, pp. 87-130.
- 신용하 (2008).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대(對) 한국 및 동북아시아 수탈 경영.” 『한국근현대사회와 국제환경』, 나남출판, pp. 325-448.
- 신장철 (1998). “일본의 순수 지주회사 부활-배경과 내용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17호, pp. 103-128.
- 안병직 편 (2001). 『한국경제성장사: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출판부.
- 안병태 (1982). “조선인 지주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경영 방식의 차이.” 『한국 근대 경제와 일본 제국주의』. 백산서당, pp. 285-316.
- 오두환 (1998). “만주에서의 조선은행의 역할.” 『경제사학』, 제25호, pp. 79-107.
- 오미일 (2015). 『한국 근대의 자본가들』. 푸른역사.
- 오진석 (2006). “한국 근대 전력산업의 발전과 경성전기(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수중 (1988). “일제하 일본인 지주 회사의 농장 경영 분석-조선농업주식회사의 사례.”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 문학과지성사, pp. 11-69.
- 여인만 (2014). “전시기 일본 기업경영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경영사학』, 제29집, 제2호, pp. 51-71.
- 이규수 (2007). 『식민지 조선과 일본, 일본인』. 다할미디어.
- 이승렬 (2007). 『제국과 상인: 서울·개성·인천 지역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 1896-1945』. 역사비평사.
- 장덕진 (2001). “가족경영의 제도적 논리: 한국 재벌의 규범적 동형화.” 『경제와 사회』, 제51호, pp. 161-188.
- 장덕진·배영 (1999). “성장과 위기를 통해 본 한국의 국가-기업 관계: 개발국가의

- 경험과 탈개발국가의 전망.” 『담론201』. 제7호, pp. 51-84.
- 전우용 (2011).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병욱 (2003). “일제 말(1937-1945) 전시금융과 조선인 자본가의 존재방식.” 『한국사연구』. 제120호, pp. 217-242.
- _____ (2004). 『한국근대금융연구: 조선식산은행과 식민지 경제』. 역사비평사.
- 정승진·마츠모토 다케노리 (2005). “영주에서 식민지 대지주료-일본 귀족 호소가와(細川)가의 한국에서의 토지집적.” 『역사비평』. 제73호, pp. 241-270.
- 정안기 (2002). “朝鮮紡織의 전시 경영과 자본 축적의 전개.” 『경제사학』. 제32호, pp. 129-159.
- _____ (2003a). “전시기 조선방직의 대 만주 투자와 營口紡織.” 『역사와 경계』. 제48호, pp. 123-155.
- _____ (2003b). “전시기 조선 경제와 鐘紡 콘체른.” 『경제사학』. 제35호, pp. 89-134.
- _____ (2005). “‘식민지 전시기업론’ 서설-종방그룹의 조선 경영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48권. 제4호, pp. 233-266.
- _____ (2010). “1920-1930년대 일제의 면업정책과 목포 조면업-카르텔(Cartel)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49호, pp. 73-113.
- 정재정 (1996). “1980년대 일제시기 경제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pp. 77-116.
- _____ (1999). 『일제 침략과 한국 철도: 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진성 (1992). “‘재벌’에서 ‘기업집단’으로-일본의 ‘재벌해체’ 과정에 대한 소고.” 『경제와 사회』. 15호, pp. 145-169.
- _____ (1996). “재벌가족과 전문경영자: 전전의 일본 재벌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제12호, pp. 235-259.
- 조명근 (2009). “조선은행법에 내재된 식민지 중앙은행제도의 모순: 감독권의 소재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34호, pp. 207-240.
- 주익중 (2003). “일제하 한국의 식민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공업화.” 『경제사학』. 제35호, pp. 63-87.
- _____ (2008). 『대군의 척후-일제하의 경성방직과 김성수·김연수』. 푸른역사.
- 지수걸 (1994). “1930년대 전반기 부르조아 민족주의자의 ‘민족경제 건설전략’: 조선공업화와 엔블럭재편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51호, pp. 35-65.
- 최원규 (2000).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이민사업과 동척이민 반대운동.” 『한국민족문화』. 16집, pp. 69-118.
- 카터 에커트 (2008). 『제국의 후예-고창 김씨가와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 기원

- 1876-1945』. 주익중 역. 푸른역사.
- 하시모토 주로·타케다 하루히토 편 (1997). 『일본 경제의 발전과 기업집단』. 장현준·권혁태 편역. 오름.
- 하지연 (2010). 『일제하 식민지 지주제 연구-일본인 회사지주 조선농업주식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혜안.
- 한석정 (2016). 『만주 모던-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 허수열 (2005). 『개발 없는 개발: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은행나무.
- _____ (2011). 『일제 초기 조선의 농업-식민지 근대화론의 농업개발론을 비판한다』. 한길사.
- 홍성찬 (1990a). “일제하 금융자본의 농기업 지배-不二興業(株)의 경영 변동과 조선식산은행.” 『동방학지』. 제65집, pp. 175-266.
- _____ (1990b). “일제하 금융자본의 농기업 지배-조선 식산은행의 成業社 설립과 그 운영.” 『동방학지』. 제68집, pp. 123-212.
- _____ (1992). 『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지주층』. 지식산업사.
- _____ (2007). “해방 후 ‘귀속국내법인’의 운영과 청산-해동농업(舊 불이농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40집, pp. 269-306.
- 홍성찬·최원규·이준식·우대형·이경란 (2006).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수리조합, 지주제, 지역정치』. 혜안.
- 瀧澤秀樹 (1984). 『현대한국민족주의론-민중경제론의 형성과 발전』. 김용관 역. 미래사.
- 石川健次郎 (1989). “재벌(사)론과 기업집단론의 접점-재벌사연구의 새로운 과제.” 『경영사학』. 제4호, pp. 217-231.
- 小林英夫 (1983). “1930년대 조선 ‘공업화’ 정책의 전개 과정.” 梶村秀樹 외. 『한국 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 pp. 478-515.
- 安岡重明 (1989). “전전기일본의 재벌소유자와 전문경영자와의 관계.” 『경영사학』. 제4호, pp. 197-215.
- Carruthers, Bruce G. (1996). *City of Capital: Politics and Markets in the English Financial Revolu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andler, Alfred D. (1962). *Strategy and Structure*.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90). *Scale and Scope: the dynamics of industrial capitalism*.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 Cummings, Bruce (1984). “The Legacy of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Myers, R. and M. Peatie (ed.).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478-496.

- Demsetz, H. (1995). *The Economics of the Business Firm: Seven Critical Commentarie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Maggio, Paul and Walter Powell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8. No. 2, pp. 147-160.
- Dobbin, Frank (1994). *Forging Industrial Policy: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France in the Railway Ag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1. No. 3, pp. 481-510.
- _____ (2005). "Business group." Neil J. Smelser and Richard Swedberg (ed.).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vans, Peter (1995). *Embedded Autonomy: State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kocpol, Theda (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Evans, Peter,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37.
- Morck, R. and L. Steier (2007). "The Global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n Introduction." Morck, Randall K. (ed.). *A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Around the World: Family Business Groups to Professional Managers*. Chicago, Ill.: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ristol: University Presses Marketing, pp. 1-64.
- Swedberg, Richard (2003). *Principles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y, William G. (1997). *Socializing Capital: The Rise of the Large Industrial Corporation in Americ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高成鳳 (1999). 『植民地鐵道と民衆生活: 朝鮮·臺灣·中國東北』. 法政大學出版局.
- _____ (2006). 『植民地の鐵道』. 日本經濟評論社.
- 君島和彦 (1973). "東洋拓殖株式會社の設立過程(上)." 『歴史評論』. 第282号, pp. 28-44.
- _____ (1974). "東洋拓殖株式會社の設立過程(下)." 『歴史評論』. 第285号, pp. 47-57.
- _____ (1976). "朝鮮における東拓移民の展開過程." 『日本史研究』. 161号, pp. 25-49.
- 宮本又郎 (2003). "日本經營史學界の最近の潮流と研究成果." 『經營史學』. 第30號, pp.

31-43.

- 大塚久雄 (1969). 『大塚久雄著作集 第1巻 株式會社發生史論』. 岩波書店.
- 小林英夫 編 (1994). 『植民地への企業進出-朝鮮會社令の分析』. 柏書房.
- 原田勝正 (2005). “北東アジアの鐵道史における1906年.” 和光大學總合文化研究所. 『東
西南北』 2005年號, pp. 124-136.
- 林采成 (2005). 『戰時經濟と鐵道運營: 「植民地」朝鮮から「分斷」韓國への歴史的経路
を探る』. 東京大學出版會.
- 河合和男·金早雪·羽鳥敬彦·松永達 (2000). 『國策會社·東拓の研究』. 不二出版.
- 荒木慎一 (2003). 『日本會社法成立史』. 信山社.
- 黑瀨郁二 (2003). 『東洋拓殖會社-日本帝國主義とアジア太平洋』. 日本經濟評論社.

| 논문투고일 : 2016년 05월 10일 |

| 논문심사일 : 2016년 05월 13일 |

| 게재 확정일 : 2016년 05월 29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2 (2016)

Sociological Perspective for Corporate History in Colonial Korea: Analysis Frame of ‘Business Group’ and Lineage of ‘State Corporation’

CHO, Jung woo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Hallym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propose new perspectives for corporate history in colonial Korea. The focus is on the ‘business group’ frame which Mark Granovetter has been used for analysing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big companies in East Asia. Granovetter argued *Zaibatsu* in Japan, *Jeabol* in Korea, and family-owned enterprises in Taiwan to be analyzed as ‘*business group*’. This unique composition of those companies is very different from the American big corporations such as General Motors, Dupont, Standard Oil com. which were defined as the ideal model of the contemporary capitalist economy system by Alfred Chandler. This model corporations are characterized by ‘vertical integration’ in terms of Oliver Williamson, but the business groups in East Asia are composed of many industrial irrelevant affiliates governed by a particular owner family.

The analytic points of this article are (1) historical formation of this corporate structure, (2) relation of state and business corporation which has supported that structure, and (3) the rule of state-corporation carried out in that relationship.

▪ Key words: Business Group, State-Corporation, Holding Company, Zaibastu, Jeabol